

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조문별 제 · 개정이유서

2018. 7.

금 융 위 원 회

1. 손해보험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강화(안 제95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역량 및 경험이 부족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역량이 장기(저축성)손해보험에 치중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
- 일반손해보험과 장기(저축성)손해보험은 상품개발 및 인수심사 등에 있어 성격이 상이하어,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검증을 총괄 담당하는 선임계리사는 양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리 업무 경험을 모두 겸비할 필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손해보험회사는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보험계리업무*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하여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제한

* 일반손해보험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보험계리업무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손해보험회사의 장기(저축성)손해보험 위주의 영업관행이 개선되고 일반손해보험 부분에 대한 상품개발 및 언더라이팅 역량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2.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시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대상 추가(안 별표6 제2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사전에 신고를 받아 적정하게 상품이 설계되었는지 검증하도록 정하고 있음
- 그러나,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험료 50%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에서 누락

나. 제·개정 내용

-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을 사전신고 대상으로 명시
- * 실무적으로는 국고로 보험료 50%를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도 금감원에 사전신고하고 있음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법령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국고로 보험료가 지원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가 명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